조국 사면이 끄집어낸 '수시의 악몽'

에스프레소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인재들이 의대로 몰려 다른 학문이 위기라고들 하는데 우리나라도 각 분야에서 천재들이 등장하던 시절이 있었다. 겨우 10여 년 전 일이다. 당시 한국 중고등학생들은 법률 사무소나 대학 연구소 등지에서 인턴으로 활약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에 제1 저자로 논문을 등재하기도 했다.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 봉사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범을 보였다. 청소년기부터 어려운 논문을 척척 썼으니 30대가 된 지금쯤 누군가는 불세출의 학자가 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을 법도 하다. 하지만 그런 인물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입시 제도가 만든 '가짜 천재'들이었기 때문이다.

대입 제도는 2000년대 들어 대전환을 맞는다. 수능 중심의 정시가 줄고 내신과 비(非)교과 활동을 두루 살피는 수시가 대폭 늘어났다. 200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와 수시 비율은 71.2대28.8이었다. 수능 성적으로 선발되는 정시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후 수시 비율이 점점 높아졌다. 2007학년도엔 비율이 역전됐다. 2018학년도부터는 3대7 이상으로 벌어졌다. 요즘은 수시로 뽑는 인원이 정시보다 4배 많다.

수시의 양상도 달라졌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수시 전형은 내신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했다. 학교 시험만 잘 보면 대학에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주입식 암기 교육과 줄 세우기식 평가가 학생의 가정 환경이나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성적뿐 아니라 교내외 활동, 연구 성과 등 다양한 비교과 요소의 중요성이 확대됐다. 이를 제도화한 게 2000년대 후반 도입된 입학사정관제와 그 후신인 학생부 종합 전형(학종)이다. 이때부터 학생들 사이에서 본격적인 '스펙' 경쟁이 벌어졌다.

입학사정관제 후 '스펙' 품앗이
조국 사태로 추악한 민낯 공개돼
30대의 조국 사면 반대 여론은
불공정 수시 겪은 세대의 분노

점수로는 드러나지 않는 학생의 꿈과 가능성을 봐야 한다는 게 틀리는 말은 아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입학사정관제나 초기 학종은 이 문제에 안이하게 대응해 부모들이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혔다. 일부 사회 지도층은 자녀에게 남다른 이력을 만들어주려고 자신이 가진 사회적 자원을 노골적으로 동원했다. 자녀를 지인이 운영하는 기관에 인턴으로 채용시키는가 하면, 대학생도 소화하기 어려운 연구에 참여시킨 뒤 논문에 함께 이름을 올리도록 했다. 대치동 사교육이 입시 경쟁을 치르는 자녀에게 약간의 어드밴티지를 제공하는 수준이라면, 이건 자기 자식들만 특설 경기장에서 뛰게 하는 것과 같았다. 편법과 부정이 난무했던 그들의 '품앗이'는 2010년대 중·후반까지 유지됐다.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의 입시 비위에 비판이 쏟아지자, 그를 옹호하는 이들은 "관행일 뿐이었다"라고 맞섰다. 서류 위조까지 관행이라 할 순 없겠지만, 몇 가지는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그것은 태어난 집에 따라 주어지는 기회마저 다른 한국 사회의 냉혹한 현실이었고, 다양성·잠재성 등 멋진 단어들이 포장하고 있는 계층 세습의 추악한 민낯이었다.

지난 15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18~29세의 50%, 30대의 62%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지지 성향이 강한 40대, 50대에서는 사면 반대 여론이 각각 36%, 35%였다. 흥미로운 건 20대보다 30대에서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는 사실이다. 30대는 평소 20대보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30대가 20대보다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건 이례적인 현상이다. 지금의 30대는 2000년대 후반~2010년대 중반 대학 입시를 치른 이들이다. 조국 전 대표 사면이 그 시절 불공정한 수시를 경험했던 세대의 분노와 좌절감을 되살린 것은 아닐까.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95]

두 세계가 만나 빚어진 고양이

터키석처럼 반짝이는 청록색 고양이 한 마리가 황금 방석 위에 앉았다. 꼬리를 동그랗게 말고서 맑은 분홍색 유리 눈으로 주인을 바라본다. 등에 구멍이 있는 것을 보아 향로로 쓰였던 모양이다. 이 고양이는 18세기 초, 청나라 경덕진(景德鎭)에서 만들어져 프랑스로 수출된 뒤, 프랑스 왕 루이 15세의 공식 정부(情婦)였던 퐁파두르 부인의 품에 안겼다. 우아하고 지적인 감각으로 유럽 상류사회의 문화와 유행을 선도했던 퐁파두르 부인은 로코코풍 실내 장식에 중국 도자기를 활용해 화려하면서도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당시는 이처럼 '시누아즈리', 즉 '중국풍 취향'이 유럽에서 대세를 차지하고 있었다.

'시누아즈리'는 17세기 이래로 유럽 각국이 동인도회사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고급 도자기와 비단, 차, 칠기 등을 폭넓게 수입하며 확산됐다. 머나먼 미지의 나라 중국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던 유럽인들에게 귀한 중국 물건을 소유하는 것은 곧 부와 권력뿐 아니라 세련된 취향을 증명하는 상징적 자산이었다. 원래 중국 황실용 도자기를 만들던 경덕진에서는 발 빠르게 유럽 소비자 취향에 맞춘 무늬와 색채의 서양식 식기류와 장식품을 개발, 특별 생산해 수출했다.

이 파란 고양이도 경덕진 출신이지만 화룡점정은 프랑스에서 이루어졌다. 중국산 도자기에 분홍 유리 눈을 끼우고, 황금빛 방석을 받치고, 방석에 술과 다리를 붙인 건 파리의 장인들이었다. 유럽 귀족들은 낯선 동양풍 물건을 사랑했지만, 거기에 익숙한 유럽 문화가 더해지는 걸 선호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작고 파란 도자기 고양이는 바다를 건너 두 세계가 만나 빚어낸 기묘한 화합의 결실인 셈이다.

작자 미상, 고양이, 1700~1750년쯤, 도자기와 청동에 도금, 45×30×22㎝, 로스앤젤레스 J. 폴 게티 박물관 소장.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社 說

"노란봉투법 1년 유예라도" 절박 호소, 무시만 할 건가

경총·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일부 독소 조항의 보완과 시행 1년 유예를 호소하는 성명을 냈다. 21일 시작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이 바뀌기 어렵다고 보고, 최악의 상황이라도 피해보자고 나선 것이다.

현재 민주당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수많은 하청 기업 노조들과 일일이 노사 협상을 해야 하고, 해외 공장을 지을 때도 노조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큰 역할을 한 조선업의 협력사 비율이 특히 높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HD현대중공업의 1차 협력사만 2420곳, 삼성중공업은 1430곳, 한화오션은 1334곳에 달한다. 선박 한 척 건조에 2~3년 걸리는 조선업은 납기 준수가 생명인데, 중간에 협력 업체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납기 지연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자동차 업체인 현대차·기아도 1차 협력 업체가 370여 곳이고, 2~3차를 포함하면 5000여 곳에 달한다.

주력 기업들이 미국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짓기로 한 공장도 노조가 반대하면 무산될 수 있다. 대기업이 노란봉투법을 피하기 위해 노조가 없는 협력사에 일감을 넘기거나 아예 해외로 빠져나갈 경우 중소 협력사들은 존폐 위기에 몰리게 된다. 부작용의 파장이 해당 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를 포함한 근로자와 가족, 소액 주주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

경제계는 세 가지 쟁점 중 하나인 노조 불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노조원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신 하청업체 노조와 교섭 의무는 없애주고, 해외 투자나 산업 구조조정 같은 사업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법이 개정되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했다. 경제계는 "최소한의 노사 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 대안을 수용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 활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당정은 이런 중요한 법안을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숙의도 없이 일방 추진해왔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중국의 급성장이란 격랑을 헤쳐나가기 힘든 우리 기업들에 또 하나의 무거운 족쇄가 채워질 수 있다. 새 정부는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통합과 실용을 강조하며 "모든 것을 혼자 100% 취할 수는 없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을 하겠다"고 했다. 이제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입시 비리 옹호하고 음모론 빠진 교육 장관 후보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비리를 옹호하는 글을 수차례 올리고 천안함 폭침 관련 음모론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막말과 음주 이력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 교육감 시절 소셜미디어에 조 전 장관 입시 비리 수사에 대해 "검찰의 칼춤"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조 전 장관을 수차례 감쌌다. 입시 비리 옹호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는 사실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최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앞으로 입시에서 조국씨 가족이 한 논문 저자 조작, 포상 조작 등은 모두 허용되는 건가. 이재명 정부는 조국씨는 사면하면서 교사들의 입시 비리 처벌은 강화하겠다는데 어느 쪽이 진심인지 최 후보자가 직접 밝히길 바란다.

최 후보자는 수행 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사법 살인'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도 공유했다. 이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내용이 담긴 책을 세종시 학교에 배포했다고 한다. 전교조 출신인 최 후보자는 이들이 민주당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비호한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천안함 음모론에도 빠져 있었다. 잠수함 충돌설, 좌초설 등 온갖 음모론에 공감을 표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어뢰 때문이라는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나라의 교육을 맡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된 10월 26일을 '탕탕절'로 부르기도 했다.

그는 2003년엔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전북 교사노조는 "교사는 음주 운전 등 5대 비위 중 하나라도 있으면 교장, 교감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중등 교사 출신이다. 교육 장관이 아니라 교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최 후보자는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마찬가지로 해명을 거부하며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만 하고 있다. 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일 것이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악수도 안 하는 여야 대표, 보는 국민이 민망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16주기 추모식에서 만났지만 대화는커녕 악수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었다. 행사마다 바로 옆자리였지만 서로 눈길도 주지 않고 상대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여야가 얼굴을 붉히고, 막말을 주고받고, 심지어 몸싸움까지 한 적은 있어도 이처럼 상대를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시작은 민주당 정 대표가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대표 경선 내내 국힘을 해산시키겠다고 했다. 대표 수락 연설에서 "지금은 여야 개념이 아니다"라며 국힘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취임 인사도 국힘을 뺀 나머지 야당하고만 했다. 이후 보름째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힘과 정말 안 만날 것이냐고 물으면 "악수는 사람과 한다"고 했다. 그러자 국힘 송 위원장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누가 정 대표와 악수하고 싶겠나. 나도 사람하고만 악수한다"고 했다.

악수는 처음 보는 사람과도 할 수 있고, 대화는 생각이 달라도 할 수 있다. 공적인 자리를 맡으면 보기 싫어도 봐야 할 사람이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싫다면 공적인 자리를 맡지 말아야 한다. 더구나 두 사람은 국회 1·2당 대표다. 두 사람의 말과 행동이 우리 국회의 품격이 된다. 그런데 그 수준이 국민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친다. 아무리 국회의원의 수준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국민이 참고 보기 민망할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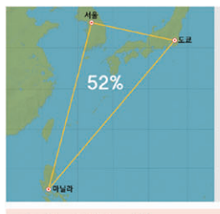
정 대표가 결자해지하기 바란다. 먼저 악수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정 대표다. 권한과 책임도 더 크다.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국정 책임을 공유한다. 국정은 당원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이다. 지금은 경제·안보·민생 모두 위기다. 집권 여당 대표가 할 일은 야당과 거칠고 모질게 싸우는 게 아니라 원만한 국정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송 위원장도 대국적인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싸우고 싶다면 말릴 수 없다. 하지만 싸우더라도 국민이 부끄럽지는 않게 해 달라.

미국이 대한민국에 묻는다

미 주도 태평양 방어(일-호-필리핀 참여)에 들어올래? Yes? or No?

뉴데일리 newdaily.co.kr

전략적 모호성? 집어 치워! | 동맹의 현대화는 태평양 방어 참여 | 엉거주춤, 애매모호, 이중플레이? | 이젠 안 통해!



◀ 일본과 필리핀은 이미 미국과 태평양 방위에 손을 잡았다. 세계무역 52% 삼각형의 한 축인 대한민국만 참여를 뭉개고 있다. 바로 이 점을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은 간접화법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 인포그래픽 = 황유정 기자

관세=연속적(sequential) vs 동맹=이산적(discrete)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 한다. 그러나 25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와야 타결이라 할 수 있다. 관세 문제와는 별개로 **진짜 교섭**이 기다리고 있다. ① **한국 부담 방위비 규모** ② **주한미군 역할 변화** ③ **태평양 방어 위한 한국군 역할 논의** 등이다.

관세율, 투자 규모 등은 《**연속적**》이다. 《**조금 더 쓸 수도 덜 쓸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군 주도 태평양 방어에 한국군이 참여하겠느냐**》라는 질문엔 《**예 / 아니오**》 대답밖에 없다. 《**이산적(離散的)**》이다. 중간이 없다.

도쿄-마닐라 이미 Yes 상태 … 우리는?

최근 《**동맹의 현대화**》란 말이 등장했다. 주한미군 **제이비어 브런슨(Xavier Brunson)** 사령관은 **"전략적 유연성은 병력과 장비를 필요한 곳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라 했다. 미국 입장에서 《**전략적 유연성**》은 당연하다.

1954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질 당시엔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었다. 소련은 해체된 지 오래고 세계 정세도 완전히 변했다. 미국의 전략 기조도 바뀔 수밖에 없다. 태평양을 위협하는 건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다.

태평양은 미국의 뒷바다, 대서양은 미국의 앞바다. 바다의 전략적 가치는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다.

브런슨 사령관의 **"도쿄와 서울과 마닐라를 연결하는 삼각형을 그린다면 세계 무역의 52%는 그 지역을 통과한다"**라는 발언이 그 전략적 가치를 웅변해 준다. 그뿐인가. 한국 해상무역의 90% 이상이 대만해협을 지나간다. 싱가폴에서 한국 일본을 자로 긋는 직선 교역로가 대만해협을 통과한다.

태평양이냐, 북중러냐 … 중간은 없다

관세협상에서 한국의 카드는 한국의 조선업이었다. 조선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산업이다. 선진국에서 노동집약산업은 대부분 사양산업이다. 조선업 철강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까지. 그러한 사양산업들이 실은 국방산업과 무관치 않다. 세계가 왜 보호주의 시대를 맞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동맹의 현대화**》의 초점은 《**전략적 유연성**》이다. 더 넓은 시각에서 **한국이 미국의 전략 기조에 기여할 수 있느냐다.** 신뢰다. 보다 직설적으로, **한국은 미국 주도 태평양 방어에 들어가는지**, 북중러로 들어가는지 하나를 찍어보라는 거다.

애매모호 고집? 미북 통로 생겨 낙동강 오리알 될 것! 중국 속국화로 미국과 맞서겠다는 게 본심인가?

과거 **애치슨 라인**을 떠올리면 쉽다.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속내를 감추려는 경향이 있다. 《***전략적 모호성***》. 그 의뭉스러움이 생존술일 수도 있다.

《게임이론》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란 혼합 전략을 뜻한다. 일정한 빈도(frequency)를 정해놓고 《랜덤(random)》하게 이쪽 저쪽 번갈아 찍는다. 속내를 철저히 감추는 게 핵심이다. 야구 경기 중 투수의 볼 배합에서 혼합 전략이 관찰된다. 직구 커터 싱커 슬라이더 커브 등 투수가 주로 던지는 볼의 빈도가 나온다. 그게 혼합 전략이다.

도박에선 그러한 혼합 전략이 유리하다. 하지만 외교는 아니다. *속내를 감추고 이편 저편 오락가락하면, 신뢰를 잃게 된다.*

미국 사회는 한국에 애뜻한 정서가 있다. 한국전쟁 때 미국 젊은이들 36,574명이 희생됐다. 약 103,284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백만 명 이상이 한국을 다녀갔다. 몇 집 건너 한 집은 피붙이가 참전했다고 한다.

반면 한국의 캐릭터는 《***보따리***》다. 물에 빠진 한국인을 도와줘 보라. ***보따리***를 감췄다고 의심받을 것이다.

이중첩자 노릇 하면 결국 파멸

한국은 동맹국 미국을 상대로 줄기차게 《***보따리***》를 찾는다. 비동맹국의 심기를 살피고, 그들 입맛에 맞춰 미국을 난감케 하는 게 바로 《***보따리 외교***》의 실체다. 비동맹국 독재국에겐 매우 공손한 반면, 모범적 민주주의 나라 동맹국에겐 지나치게 까다롭다. 동맹국에게서 보따리를 꾸어 내 비동맹국에 조공으로 바치는 격이다.

문제는 신뢰다. 요구하는 돈 액수에 중간은 있다. 동맹 관계에 중간은 없다. 중간은 《***더블 에이전트***》다. 적보다 더 위험한 게 《***더블 에이전트***》다.

실리를 얻기 위해선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한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전략적 모호성**》으로 착각해선 안된다.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8월 14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71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컨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